



7일 정사협이 주최한 교육개혁토론회에서는 제도나 정책, 학부모 의식 등의 문제에 앞서 교육 현장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의 개혁과 함께 교사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개혁 출발점은 학교”

교육과정·교수학습방법등 전면 개편...지역마다 '개혁위'설치해야

교육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짚어보는 '당면한 교육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지난 7일 '정의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정사협·상임공동대표 이세중 대한변협회장 등) 주최로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교육계 일각에서 개혁의 우선 대상으로 학부모의 의식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학교 현장, 특히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이며 개혁의 기본원칙도 철저히 학교 중심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서울대 조영달 교수(사회교육학)는 주제 발표를 통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교육개혁위원회는 전체 사회의 관점에서 교육개혁의 전반적인 방향을 검토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일에만 전념해야 하며, 구체적인 개혁전략 마련에는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교육

‘교육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혁의 큰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개혁이 현장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화와 분권화가 선행해야 하며, 각 기초단위지역의 교육개혁을 담당할 ‘지역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학교 현장의 문제 중에서도 교육과정, 교과서 및 교수학습자료, 교수학습방법의 문제가 교육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라며 “이 부분의 개혁이야말로 개혁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사의 연구와 노력이 없이는 교육 현장의 발전이 불가능한 만큼 교수학습방법을 연구하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교육연구모임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조 교수는 이를 위해 교사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고 관료적 틀에서 해

방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경쟁력 강화도 단순히 외국어 사용능력의 향상이나 엘리트 분리교육 등만으로는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지진아와 평균적 학생들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능력의 향상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박병진 의원(민자)은 지역교육개혁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조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교육자치제도 개선이 지나치게 분리와 독립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가서는 곤란하다”고 자치의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박석무 의원(민주)은 교사들이 창의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할 수 있게 제도적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아직도 ‘교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교육해야 한다’는 교육법

규정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교사들의 창의적 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대 김신복 교수(행정학)는 “미국의 교육개혁이 실패한 것도 중앙의 논의가 현장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교사들이 개혁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교육의 질 높이기 운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서울대 이명현 교수(철학·교육개혁위원)도 “교육 현장의 개혁은 결국 교사가 할 일”이라며 “입시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학생의 절반인 중·하위권 학생들을 위한 다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대표로 토론에 나선 전종자(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씨는 “개혁승패의 기준은 교육현장”이라며 “학교만 믿어도 되는 교육, 학생을 ‘학교로 불러들이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선 기자